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30 복장검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피 해 자 ㉠㉠여자고등학교 학생
피 신 청 인 ■■■(㉠㉠여자고등학교 교장)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학교에서 학생(선도부)이 다른 학생의 용의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각급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여자고등학교는 학교규칙을 임의로 개정하고 필수적인 사항(학생회 관련 규정 등)을 누락하였으며, 부적절한 방식의 설문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학교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다. ㉠여자고등학교 현행 학교규칙에는, 학생들의 개성실현의 권리, 자치활동에 관한 권리,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권침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여자고등학교장에게,

가. 학생이 다른 학생의 용의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 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선도부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여자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학교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적절한 개정 절차를 거친 점과 해당 규정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학생인권을 침해 또는 침해할 위험이 있는 위 학교규칙에 대해, 적절한 절차에 거쳐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여고 서비스헌장 및 이행 기준 준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

례」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6. 11.(목)

나. 신 청 인 :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다. 피 해 자 : ㉠㉠여자고등학교 학생

라. 피신청인 : ■■■(㉠㉠여자고등학교 교장)

마. 신청요지

1) 2015. 6. 8.(월) 07:45경 교문과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복장검사를 하였다.

2) 학교 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여고 서비스헌장 및 이행 기준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2. 관련 규정

[별지 2]와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위 구제신청요지와 같다.

나. 참고인(㉠㉡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의 주장

※ 학생회 임원(학생회장 김○○, 3학년 부회장 김○○, 2학년 부회장 임○○, 선도부장 송○○, 선도부차장 황○○, 3학년장 김○○, 2학년장 김○○)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4명씩, 주 1회 정도 돌아가면서 30분 일찍 등교(7시50분~8시20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문지도를 하고 있는데, 평소 지도는 얼굴과 학생증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2) 1년에 3번 ‘총선도’라고 하는 대규모 선도를 할 때가 있는데, 동복, 간복, 하복의 교체일에 실시한다. 선도부들이 각각의 교문 위치에 서서 평소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머리, 교복치마 길이 등을 확인하고, ‘총선도’를 할 때는 선도부원들이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등교(7시20분에 선도 시작)하여 지도한다. 이때 선도부 1, 2학년 34명이 선도를 하고(선도부 3학년은 활동을 안함), 정문에 18명을 배치해서 9줄로 서서 선도를 하며, 후문과 기숙사에 16명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3) 학교 규정에 ‘교복 상의와 하의가 5cm 겹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할 때 자로 재는 것은 아니고, 눈으로 보았을 때 속옷이 보이는 경우 등에 적발을 하고 있다.

4) 치마 길이가 문제되어 적발된 학생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 처리 방법은, 선생님이 적발된 학생에게 “치마가 짧은 것 같으니 늘려와라”고 하시고, 적발된 학생이 치마길이를 늘려와 확인을 받으면 적발 대상에서 삭제해 주고 있다.

5) 주로 걸리는 특정 언니들은 자기도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선도부원들에게 인상을 쓰고 “짜증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선도

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무리 존댓말을 하고 착하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6) 선도부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거 같고 2014년에 생긴 것 같은데, 그 규정은 적용해 본 적이 없고, 언제 어떻게 왜 추가되었는지는 모른다.

7)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냈고, 예전부터 항상 해온 교문지도였는데 교문지도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니, 그런 불만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8) 선거로 뽑은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년장이 있고, 선도부장은 선도부 내에서 뽑히는데, 선도부는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도부 희망 학생들이 선도부 지원서를 내면, 전대 선도부원이 지원서를 낸 후보들 중에서 후대 선도부원을 뽑으며, 학생회에 선도부가 속해있기는 하지만 좀 특별하다.

9) 전체 학생들이 투표하여 뽑은 것이 아니라 선도부가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도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등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10) 예전에 외투는 회색, 남색, 검은색이 허용되었는데, 2014년 규정에서 검은색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와 더불어 하복 관련 내용과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의 기존 규정에 대해 같이 안내를 했다.

11) 2014년에 규정 개정 관련한 것은, 당시 2014년 학생회랑 선도

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고가 동창회가 활발하고, 동창회에 동문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해당 규정 개정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작년에 회장단 언니와 선도부 언니들이 ‘검은 외투로 통일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고 들었다.

12) 규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고, 대의원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선도부에서도 의견을 발표하며, 이후에 학생회 대표와 교장선생님,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13) 고등학교 들어와서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다.

4. 관련자료(학교생활규정) 검토

[별지 1]과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인정사실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구제신청요지 1)항 관련

1) ㉠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08:20이다.

2) 2015. 6. 8.(월)은 하복 교체일로 일명 ‘총선도’일로 정하고, 07:20경부터 08:20까지 선도부 학생 34명(정문 18명, 후문, 기숙사 16

명)을 배치하여 2명씩 1조가 되어 줄을 서서 등교지도(교문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도교사(정문-■ ■ ■, ● ● ●, 후문-● ● ●)들은 07:50경부터 등교지도를 실시하였다.

3) 선도부 학생들은 각각의 교문 위치에 서서, 학생들의 머리, 교복치마 길이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4) ☎☎여자고등학교 별점규정에 따르면, '선도부의 지시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별점 3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학생들이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하는 학생들의 권한 및 한계에 대해서 학칙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위 학교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위 2)항 및 3)과 같은 행위는, 권한 없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학칙으로 학생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끼리 용의·복장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은, 학생 간 불신, 불화,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6) 학생 간 불신, 불화,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의·복장에 대해서는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학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이 있는 교사가 지도를 하고, 보충적으로 선도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 2)항에서 알 수 있듯이, 위 학교는 2015. 6. 8.(목) 07:20경부터 07:50경까지 약 30분 정도 교사가 없이 학생들만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복장 등을 지도하였고, 07:50경부터 08:20경까지 약 30분 정도 교사가 있는 상태

에서 지도하였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선도부 학생들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보충적으로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선도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4)항에서 알 수 있듯이, 선도부 학생들의 지시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점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도부 학생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학생이 학생의 용의·복장에 관여하는 것은 학생 간 불신, 불화, 갈등 등의 이유가 되어,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학생이 학생에게 지도를 받을 때, 특히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에게 지적받을 때는 교사에게 지도를 받는 것보다 더 심한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 ㉠여자고등학교의 용의·복장 지도 방식은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요지 2)항 관련

1) ㉠㉠여자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 결과 위 학교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없으며, 생활규정에 규정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2)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 학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다른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절차에 따라, 2014. 3.26.(수)~27.(목) 생활선도규정 개정 희망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4. 1.(화) 학교생활선도규정 개정 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였다.

3) 2014. 4. 2.(수) 학교생활규정 개정 실무추진위원회(내부공문 상심의위원회가 실무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9.(수) '2014 개정 생활선도규정'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달 10.(목)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개정된 '2014학년도 생활선도규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4) ㉠㉠여자고등학교 '2014학년도 생활선도규정'은, ① 의견수렴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개정 항목에 대해 '희망·불희망'으로 양자택일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였던 항목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② 학생용 설문에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용 설문에 학생의 학번, 성명, 학부모 성명 및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조례 제1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통상적으로 규정개정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학교규정 개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규정 개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므로, 학교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인권우호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여자고등학교 2014학년도 생활선도규정'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규정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기존의 2014년 규정을 인정하고 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하 ‘개정’이라고 표현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생활선도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여자고등학교 2014 학년도 생활선도규정’ 및 기존의 위 학교 생활선도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여자고등학교는 2009년, 2011년, 2012년 3월, 2012년 11월, 2014년까지 용의복장 규정을 5회 개정했는데,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허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규정(2014년)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때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용의복장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허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교복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② ⓈⓈ여자고등학교는 2009년, 2011년, 2012년 3월, 2012년 11월, 2014년까지 별점규정을 5회 개정했는데, 그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별점 항목이 증가하고, 별점이 높아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선도부의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별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학생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별점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2년 11월 개정 시, ‘별점봉사활동 운영 방안’에 학생회, 선도부 임원 지원불가 및 학급실장, 부실장 출마 자격 제한(6개월

이내 별점봉사활동 실시한 자)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별점항목을 줄이고, 학생 간 지시 및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별점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해당 조항을, 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3월, 2012년 11월, 2014년 학교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관련 내용을 생활규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④ 선도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하는 부서가 아니라 자치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선배 선도부원이 선도부를 희망하는 후배들의 지원서를 받아 지원자 중에서 선도부원을 선발하고 있고, 선도부장은 선도부 자체 내에서 투표를 통해 뽑고 있으므로, 학생자치조직으로 보기에선 절차적 대표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선도부의 구성 및 운영은, 학생회 내에 두어 학생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학생들을 대상(학급 실장, 부실장 등 임원들로 구성)으로 구성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하든지, 학생회 기구와는 별도로 학칙으로 규정하여, 특수한 형태의 자치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제신청 요지 3)항 관련

‘민원서비스헌장’의 준수 등은 친절, 만족 등 일반적인 행정 처리

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2조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학교 생활규정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규정 내용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생활규정을 비롯하여 학교 규칙을 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별지 1] 학교생활규정 검토

학교생활규정 검토

1. 2014년 학교생활규정 개정

가. 규정 개정 경과

- 1) 2014. 3.26.(수)~27(목) 2014 생활선도규정 개정 희망조사
- 2) 2014. 4. 1.(화) 학교생활선도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 3) 2014. 4. 2.(수) 16:00 학교생활규정 개정 실무추진위원회 협의회 개최 : 학생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2명 총 12명 위원 중 11명 참석
- 4) 2014. 4. 9.(수) 2014 개정 생활선도규정 시행
- 5) 2014. 4. 10.(목) 2014 개정 생활선도규정 가정통신문 발송

나. 규정 개정 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
| · 검정색, 교복색, 회색의 외투, 바람막이, 패당조끼 · 몸통부분이 검정색, 교복색, 회색 바탕의 외투, 바람막이, 패딩 조끼 허용(단 어깨와 팔, 겨드랑이 선 위까지 무늬나 다른 색깔 허용) | 검정색 외투, 바람막이, 패딩조끼 허용 |

다. 규정 개정 절차에서 없는 임의 개정 내용

| 규정 | 항목 | 내용 | 구분 |
|----------------|------|--|------------------|
| 복장 용의 규정 | 신발 | 검정색 단화 굽높이 3-4cm를 1-2cm | 개정 |
| | 악세사리 | 종교용 목걸이 불허 | 신설 |
| | 실내화 | 내빈용 실내화 착용시 별점 부과(5점) | 신설 |
| | 가디건 | 2,3학년의 경우 신입생과 같은 것을 입을 수 있으며, 검정색, 교복색, 회색 착용가능 | 내용 삭제 |
| | 외출 | 외출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서 점심시간, 청소 시간에 외출 | 신 설 (청 소 시간 제한) |
| 별점 규정 | 복장 | 2점에서 4점으로 | 개정 |
| | 식당질서 | 1점에서 5점으로 | 개정 |

2. 학교생활규정 내용

가. 2014년 학교규정 내용 및 특이사항

| 항목 | 학생선도규정 | 학생생활규정 |
|----------------|---------------------------|---|
| 주요내용 | 총칙, 생활선도위원회, 표창, 징계, 징계기준 | 복장용의규정, 별점규정, 휴대폰 및 MP3 관리 지도, 별점제 운영 계획, 별점봉사활동 운영방안, 상점제 운영개정 |
| 규정 개정 절차 | 없음(학칙에도 없음) | 없음(학칙에도 없음) |
|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없음(학칙에도 없음) | 없음(학칙에도 없음) |
| 학생 자치기구 | 없음 | 없음 |

| 항목 | 학생선도규정 및 학생생활규정 |
|------|--|
| 특이사항 | · 머리 : 길이 제한 없음(염색, 코팅, 파마, 고데, 무스 금지) |
| | · 양말 : 검정색 타이즈(동복) 만 허용, 스타킹 불허(발목보이면 벌점), 살구색 스타킹 허용(하복, 간복, 반드시 양말 착용) |
| | · 티셔츠 : 검정색만 허용 ※겨울외투, 가디건 검정색만 허용 |
| | · 바지 규정 없음(치마만 규정) |
| | · 등교 시 목도리를 했을 경우, 반드시 풀어서 선도부에게 목을 보이고(티셔츠와 남방 등을 보기 위함) 등교해야 함. |
| | · 지시불이행(3점) 관련 : 선도부의 지시와 요구 및 교사의 같은 항목에 대한 반복된 지적 |
| | · 월 벌점 30점 이상 또는 벌점으로 봉사활동 3회 초과한 자는 선도위원회 회부 |
| | · 벌점 봉사활동 운영방안에서 벌점 봉사활동 1회 이상 대상자 학생회 선도부 임원 지원불가 |
| | · 학급 실장, 부실장 출마자격 제한(6개월 이내 벌점 봉사활동 실시한 자) |

나. 2014년 이전내용

1) 2012년 11월 학교규정

학생선도규정(총칙, 생활선도위원회, 표창, 징계, 징계기준), 학생생활규정(복장용의규정, 벌점규정, 휴대폰 및 MP3 관리 지도, 벌점제 운영계획, 벌점봉사활동 운영방안, 상점제 운영) 등

2) 2012년 3월 학교규정

학생선도규정(총칙, 생활선도위원회, 표창, 징계, 징계기준), 학

생활규정(복장용의규정, 벌점규정, 휴대폰 및 MP3 관리 지도, 과
벌점자 지도 계획, 벌점봉사활동 운영방안, 상점제 운영) 등

3) 2011년 학교규정

학생선도규정(총칙, 생활선도위원회, 표창, 징계, 징계기준), 학
생활규정(복장용의규정, 벌점규정, 휴대폰 및 MP3 관리 지도, 과
벌점자 지도계획, 벌점봉사활동 운영방안) 등

4) 2009년 학교규정

학생선도규정(총칙, 학생선도위원회, 표창, 징계, 징계기준), 학
생활규정(복장용의규정, 벌점규정, 휴대폰 및 MP3 관리 지도, 과
벌점자 지도계획, 벌점봉사활동 운영방안) 등

5) 2007년 학교규정

학생선도규정(총칙, 학생선도위원회, 표창, 징계, 징계기준), 생
활지도계획, 학생 교내생활지도점수제, 복장착용 시 준칙사항, 동복작
용에 따른 복장 규정 안내, 학생기본생활규범 등

다. 생활규정 내용 중 학생자치기구(학생회) 관련

2002년의 학교규정 중 학생생활선도규정(2002. 12. 9. 개정, 시
행)에 나타나며, 그 이후 규정에는 없음

라.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 등

- 학교주변 수시 순찰강화, 고사 및 수능 후 교외 생활지도, 교과
시간을 활용한 인성 핵심요소 지도, 중식 및 청소시간, 방과 후의 교
내·외 생활지도, 조회, 종례 시간을 활용한 기본 생활습관 지도, 인

성인권안전부 및 생활지도 선도 교사의 등·하교 지도

- 교내 생활지도 오전 07시 50분부터 담당교사가 지도 시작
- 구성원과 협의하여 만들어가는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며,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기당 1회 이상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함
- 건의사항 개선을 위한 협의를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인성부장, 학생회담당교사, 학생회 임원이 참여하여 개최함
- 자율적인 생활규정 및 규칙 준수를 위하여 학생회에서 식사시간 질서유지 및 위생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하고 기본생활습관 및 생활규정 준수를 위한 등교길 선도활동을 생활규정지킴이(선도부)가 함

[별지2]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 ③ 생략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생략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